

☾ 이공계 대학 연구소에

200억 추가 지원

이공계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산·학·연 연구기반 구축에 2백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산업지원부는 대학을 산업기술 개발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이공계 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 12월 초 세부 사업을 공고키로 했다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 구축사업과 현장 기술인력 양성사업 예산을 2001년도 7백70억 원에서 2002년에는 9백70억 원으로 26% 늘릴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규모 연구소를 제외하곤 대부분 장비나 연구 인력이 부족해 자생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학과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신기술 및 특화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연구인력 장비 등 자체 인프라를 구축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지역별 기술연구 집단화 사업에 해당 지역 대학 부설 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학내 개별 연구소를 종합연구소로 통합하는 한편 우수 연구소에는 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부실한 연구소는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국인 학교 설립규제 완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 현재 외국인 과 귀화한 내국인으로 제한된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을 내년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고 있으면서 해당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내국법인들도 외국인학교 설립이 허용되고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도 일반고교를 졸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졸학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인정 기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역사 등에 대한 교과를 2개 과목 이상 각각 주당 1시간 이상 운영하거나 이들 과목을 통합해 주당 2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 중등자격 소지 2천500명

교대 학사편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 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2002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천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2천 500여 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는 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천500여 명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 지역을 결정해 해당 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천~4천여 명을 교대에서 1년 또는 1년반 동안 7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교대 학점제’ 방안을 가장 유력한 초등교사 확충 방안으로 추진해왔으나 교대생 등 각계의 반대여론을 수용해 철회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밖에 교대 총장협의회, 교대 교수협의회, 교대 학생 대표가 합의해 건의한 ‘임시교원양성소 규정 폐지’와 ‘초등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수용하고 중장기적인 초등교원 수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 실업고교 동일계 대입전형

부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월 4일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육성방안은 실업고생들이 교육과정의 특성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해 실업고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있는 대학의 동일계열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정원의 3%까지 정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공고 졸업생의 공대 관련 학과 진학과 농고 졸업생의 농대 관련 학과 진학 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4년제 대학의 공대, 농대, 상대, 가정대, 해양수산학과 등 실업교육 관련 학과의 2004학년도 정원 12만7천여 명을 기준으로 할 때 3,800여 명이 동일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실업고 졸업생들의 44.9%가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바뀌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실업계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고생의 학비 감면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실습기자재 보유율도 60.6%에서 75%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고의 남은 기자재

를 연차적으로 바꾸기 위해 2005년까지 1,64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6개 사이버대학 금년 개교

허용

지난 11월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인가를 신청한 원광대의 사이버게임대학을 비롯, 한양사이버대학, 새길디지털대학, 동서사이버대학, 아시아디지털대학, 영진사이버대학 등이 조만간 최종인가를 받고 금년 3월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이버대학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가가 나오면 고교 졸업자(2002년 졸업예정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의 사이버대학은 모두 15개로 늘어나게 되고, 모집 인원은 총 1만 6,700명으로 지난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고교 졸업의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에 따라 고교생활기록부나 자격증, 수능시험 점수, 외국어 능력, 각종 입상경험, 회사 경력 관련 서류를 내는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단, 지원자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한 15개 대학 외의 사이버대학은 졸업하더라도 학사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학생 '중환' 예산

20억 배정

정부는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체험활동(중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에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대학생 연수교육 등을 실시키로 했다고 지난 11월 1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환은 대학생들이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생산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뒤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금년 1~2월 실시예정인 동계 중환부터 대학생 8,750명(1인당 20만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관련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체험사례집 발간과 우수 체험수기 포상 등을 통해 중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난 7~8월 하계 중환에 대학생 3,090명이 참여해 중소기업 1,128 곳에서 일했다"며 "대학생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효과가 매우 좋다"고 말했다. 양기관은 정부와 대학간 협정을 통해 '중환'을 학점으로 인정토록 해주고 중환 경험이 있는 대학생

에 대해선 취업을 우선 추천해 주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 IT학과 환경개선 600억 지원

정보통신부는 지난 11월 13일 실무능력을 겸비한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2년도 IT학과 교육환경인프라 개선사업에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이 IT학과의 정원을 확대하거나 소프트웨어(SW)학과·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산업체 수요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경우 IT 실습·실습장비 구입비 및 교수요원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SW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교에는 2년간 20억원, IT학과 정원을 확대하는 대학원에는 2년간 15억원,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경우 연간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 IT 등 6개 전략분야

40만명 양성

정부는 지난 11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장관 간담회를 갖고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다. 정부는 6대 전략분야 중 핵심분야에서 석·박사급 고급 인력양성·개발·활용체제를 구축, 현재 세계 28위권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을 2006년에는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6대 전략분야에서 민간기업의 인력양성을 유도하는 동시에 2002년 4,900억 원, 2003년 5,900억 원, 2004년 5,700억 원, 2005년 5,900억 원 등 4년간 2조2,400억 원의 재정을 이들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002년과 2003년에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2,000명 가운데 800명을 국가전략 분야에 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까지 6개 분야별 인력수요는 IT분야 27만525명, BT 9,470명, NT 4,200명, ST 1,100명, ET 7,084명, CT 11만6,100명 등 40만8,479명이나 기존의 대학·기업 등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22만1,993명으로 18만6,486명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양성체제에서 배출되는 22만여 명의 질을 높이고 부족인력 18만여 명을 신규 양성하며, 특히 이들 분야의 대학 모집정원을 대학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학과 정원은 수도

권 대학 증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예외적으로 적용 받지 않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월 20일 교수 채용 및 재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립대 교수도 똑같은 법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자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탈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재임용 탈락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들은 재임용 탈락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법원도 "임용기간이 끝난 교수의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되고 임명권자가 재임용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임용 탈락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수

지위가 상실돼 소송 대상이 안 된다"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행정소송을 기각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교수를 채용할 때는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 기준과 점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 '범국민 학벌문화 타파운동' 전개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학벌문화를 없애기 위해 "범국민 학벌문화 타파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민층과 중산층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학벌문화 타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정부차원에서 학문타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27일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학벌문화 타파자문위원회와 추진기획단, 전문가협의회를 차례로 구성, 학벌문화를 없애나갈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초에 경제 5단체와 만나 학벌만능주의를 조장하는 기업의 고용과 임금차별 관행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벌타파 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 2003학년도부터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는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예정이고,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002학년도부터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 물가당국과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2003학년도로 그 시기를 늦췄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

화됐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다만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기여입학제 단계적 도입 요청

산업자문부가 단계적인 기여입학제 도입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자문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2일 "이공계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방안으로 기부금을 이공계에 대한 장학금 및 시설확충에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기여입학제의 단계적 도입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요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의 이런 움직임은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기피와 기업수요와 동떨어진 대학교육에 따라 향후 5~10년 후에는 기술입국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95년 전체 응시자의 43%를 차지하던 이공계대학 응시비율이 올해는 27%로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특히 공학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재교육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공계 출신들의 취업률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산자부는 지적했다.

● 교대 특별편입학제 적법 판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재판관)는 지난 12월 7일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광주, 춘천 등 6개 교대가 12월 9일 실시되는 교대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을 중지시켜 달라며 낸 편입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현재 관계자는 "교대 편입생 특별전형 대상자 선발시험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받아들

일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전국 6개 교대는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편입생 특별전형이 정원 초과로 교대생들의 기본권과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11월 24일 헌법소원과 편입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소원에 대해선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협의회 산하 춘천, 대구, 광주, 광주교대는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각 지방법원에 행정처분무효 가처분 신청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으며 광주의 경우 11월 30일 신청이 기각됐다.

● 국·공립대 교수도 특허권 소유 가능

금년부터 전국 46개 국·공립대학도 특허권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은 지난 12월 10일 이런 내용의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연간 2000여건 이상 개발하고도 대부분 사장되던 교수들의 특허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술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개발이 활발한 대학은

연간 10억 원 이상의 기술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국립대 교수가 발명한 특허는 국가 소유로 특허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 대졸자 취업난 해결방안을

위한 전국대학총장회의 개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월 11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전국대학총장회의를 소집, 대졸자 취업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졸자 취업난 문제로 대학총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처음이다. 금년 2월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전국 192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두 참석하고,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총리와 진념 경제부총리 및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월 초 대졸자 신규채용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지방대 및 여학생에 대한 차별을 없애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한 부총리 명의로 전국 100대 기업에 보낸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동부는 금년부터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인턴 취업 지원 외에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3만 5,000명 중 우선 3만명을 정부 부처에 나머지 5,000명은 대기업에 할당해 금년 1월 초부터 인턴 연수·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연수협약을 체결한 뒤 1월 중순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 대학등록금 용자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월 13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등록금 전액(한명당 평균 2백20만원)을 용자해 주는 학자금 용자 수혜인원을 지난해 22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고, 학생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지난해 5.75%에서 5.25%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은행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용자 신청은 각 대학 장학과에 구비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대학 IT교수초빙'에 30억 지원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산업체, 연구소의 정보기술(IT)전문

가를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금년에 30억원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지난 12월 16일 밝혔다. 교수 초빙을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대학원·전문대학이며 지원규모는 대학교의 경우 2억원 이내, 전문대는 1억원 이내다. 초빙교수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산업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1월 10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수요원 풀(Pool)로 등록된다. IT교수요원 초빙을 원하는 학교는 교수요원 풀에서 선택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물에 대한 교수요원 활용신청서를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 계획' 확정 발표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가인적자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확정된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청사진을 담은 정부의 첫 공식보고서로, 2005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주요

과제 및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이 기본계획 안에 가장 주목되는 것이 산·학·연협력단이다. 이 협력단은 대학 내에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법인이 이를 대신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산·학·연 협력단이 설치되면 협력단이 정부·기업과 독자적으로 각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즉 협력단이 정부·기업과 계약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여기서 생기는 수익은 대학발전과 산·학·연 협력 발전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 또 협력단 속에는 학교기업(School Enterprise)이 수십 개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외국대학(원)의 분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추진된다. 외국대학이 해당 국가의 자국법에서 인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도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대학 유치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다.